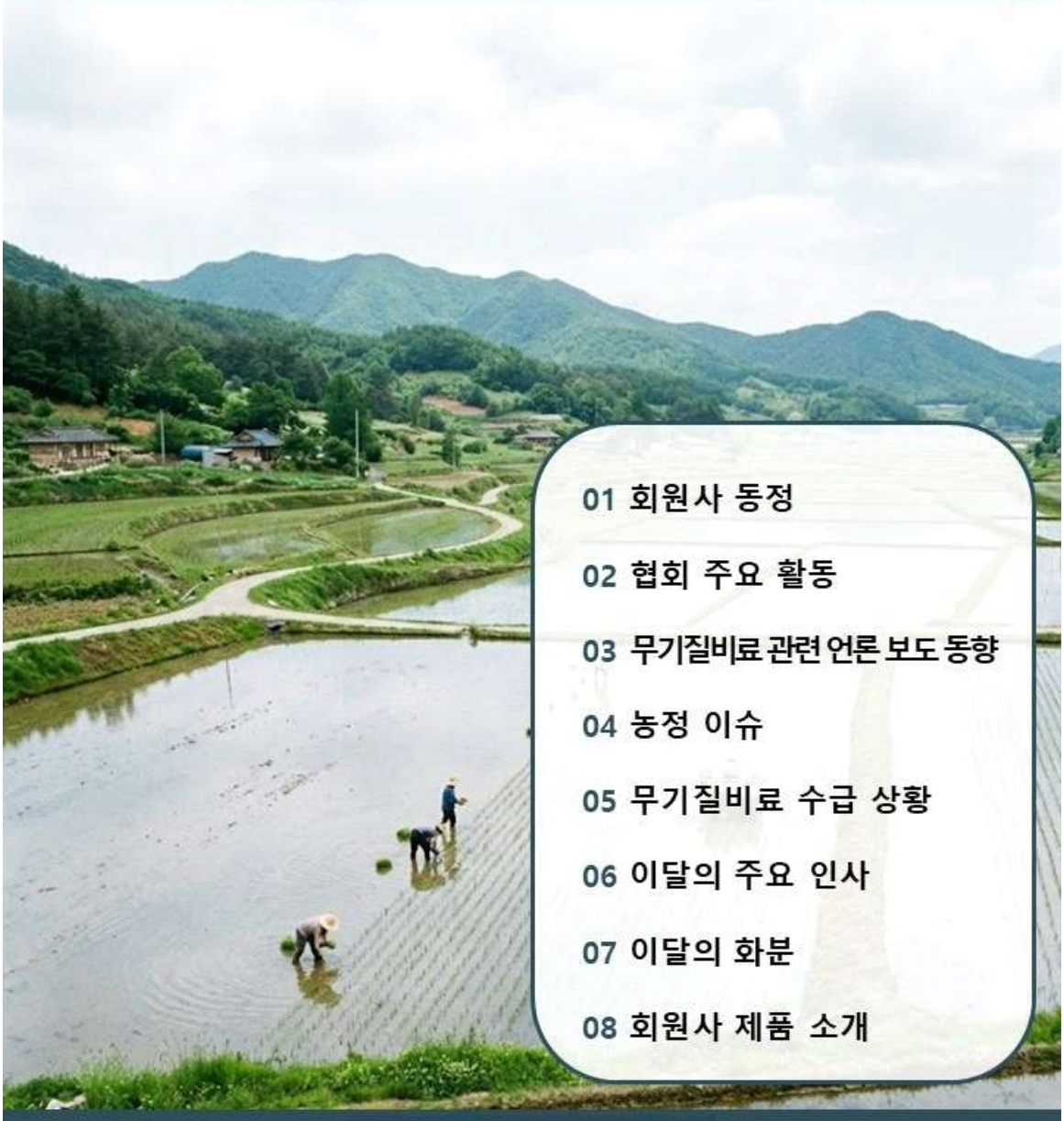
KFA 비료와 식량 2026년 5월호

Fertilizer & Food



01 회원사 동정

02 협회 주요 활동

0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 보도 동향

04 농정 이슈

0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06 이달의 주요 인사

07 이달의 화분

08 회원사 제품 소개

KFA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 가성비 좋고, 안전하며, 효과적입니다.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3 FAX : 02-552-2814

남해화학㈜ · ㈜조비 · ㈜팜한농 · ㈜풍농 · ㈜한국협화 · ㈜세기 · KG케미칼㈜

1 회원사 동정

❑ 남해화학(주)

○ 여수 남해화학, 공장 주변 쓰레기 수거 '구슬땀'

– 여수시 '사업장 앞 청결 유지 조례'에 발맞춰 자발적 청결 활동 동참

국내 대표 비료회사인 남해화학 주식회사(대표 김창수)는 깨끗한 산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일 여수국가산단 내 낙포동 지역 쓰레기 청소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 활동에는 남해화학 임직원 약 40명이 참여해 공장 인근 상암천 주변 도로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흘러 내려온 오물들을 정리해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등 사업장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앞서 여수시는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 제4조(청결 유지 책임) 조항에 따라 산단 입주사들에 자발적인 청결 활동 참여를 요청해 왔고 남해화학이 동참하면서 이번 정화 활동이 추진됐다.

김창수 남해화학 대표는 "공장 내부 및 인근지역 정화 활동 등을 통해 깨끗한 산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헤럴드경제(2026.5.19.) 기사내용 인용

❑ ㈜팜한농

○ 팜한농, 정원박람회서 '창사원 모듈팜' 첫선

팜한농이 오는 10월 27일까지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해 '창사원 모듈팜'을 처음 선보인다.

창사원 모듈팜은 조립형 방식으로 제작한 자연 채광형 온실에 자동 환경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모델이다. 주문에서 제작까지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공간 규모와 용도, 예산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 도심 속 다양한 장소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창사원 모듈팜은 박람회 기간 동안 서울숲 입구 기업 정원 구역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팜한농은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팜한농 관계자는 "도시 곳곳의 다양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창사원 모듈팜에서 도시민 누구나 햇빛 가득한 건강한 공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6.5.8.) 기사내용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협회 방문, 농업전문지(농민신문)와 인터뷰(5.12, 협회)**

○ 무기질비료 생산업체 경영손실 장기화로 인한 R&D 투자 애로, 종업원 감소 등 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 **협회 방문, 관련 업체(에이치설퍼) 면담(5.14, 협회)**

○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유황·황산 수급 변화 동향을 공유하고, 협회 회원사 가입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

❑ **협회 방문, 농업전문지(농수축산신문)와 인터뷰(5.14, 협회)**

○ 중동사태와 관련하여 무기질비료 업계 입장을 대변한 우호적 기사 작성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최근 비료업계 전반의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 **상임위원회 개최(5.20, 협회)**

○ 글로벌 공급 불안 상황에서도 정부의 농가 안정공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조달한 고가 원료 투입분의 가격손실 보전, 가격 조정 등 업계 현안 및 대응방안 논의

❑ **농식품부 대외협력 업무 수행**

○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 1차회의 참석(5.8, 농식품부 대회의실)**

– (목적) 가축분뇨·영농부산물 자원화, 저탄소 농기자재 산업 육성, 고효율·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영농형태 태양광·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과제 논의

– 협회 전무이사는 “완효성비료가 환경부담 저감과 농촌인력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완화 등에 기여하므로 사용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코팅물질 R&D에 대한 국가지원 요청

* 우량비료는 완효성비료에 비해 생산이 비탄력적이므로 시기를 늦추는 방안 제안

○ **비료 안정공급에 따른 생산업체 손실 보전 방안 마련 요청(5.19·20, 국장 실장)**

– 협회 전무이사는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담당자 및 국장·실장실을

방문하여, 정부 안정공급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료업체 손실 보전 방안 마련, 가격 인상 시기 조정 요청 등 무기질비료 업계 입장 전달 및 애로사항 건의

○ **비료 납품가격 인상 시기 지연에 따른 생산업체 손실 보전 항의 방문 (5.21, 농식품부 첨단기재종자과장)**

– 중동 분쟁, 중국 수출제한 등 글로벌 수급 혼란이 가중된 상황 속 정부·농협의 안정공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고가 원료를 다량 수입하고, 농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가격으로 평시보다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으나, 4월부터 고가 원료투입에 따른 손실에도 비료가격 동결로 생산업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

– 비료가격 조정 시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생산업체 손실에 대해 가격 인상분 소급 적용, 이미 확보한 전쟁추경 보조금 사전 집행 등 실질적인 손실 보전 방안 마련 요청

– 향후 필수농자재 지원법 하위법령 제정 시 전쟁·수출제한으로 인한 글로벌 가격 급등 시 비료 생산업체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정부 지원근거를 명확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

❑ **농진청 주관 국가 미생물산업 정상화 프로젝트 행사 참석(5.28)**

○ 정부의 미생물산업 육성 정책 방향, 정부 주도 미생물 개발 현황 및 비료공정규격 설정 추진 동향 파악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보도 동향

❑ **인도, 두 배 가격에 요소 비료 250만t 수입 추진...글로벌 공급난 가중 우려**

– 250만 t, 인도 연간 수입량의 4분의 1 규모...두 달 전 가격의 두 배 가격에 구매

세계 최대 요소 수입국인 인도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내 공급량 부족을 메우기 위해 250만 톤의 요소 비료를 수입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인도 정부가 단일 입찰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250만 톤의 요소 비료를 수입**하기로 했다며, 국영 인도칼륨회사(Indian Potash Limited, IPL)이 인도 서부 해안과 동부 해안을 통해 **각각 150만 톤, 100만 톤을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IPL의 구매 가격이 이란 전쟁 발발 전인 두 달 전 가격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 해안 인도 조건 물량은 톤당 935달러(약 138만 6000원), 동부 해안 인도 물량은 톤당 959달러에 구매 계획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앞서 이달 초 연간 요소 수입량 1000만 톤의 4분의 1 수준인 250만 톤의 요소 비료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IPL은 입찰에서 560만 톤의 요소 공급 제안을 받았으며, 그중 소량만이 톤당 935달러에 제시되었고, 대부분의 입찰가는 1000달러 안팎에 집중되었으며 최고 1136달러도 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농업이 전체 고용의 약 40~50%, 국내총생산(GDP)의 약 16%를 차지하는 인도는 세계 최대 수준의 비료 수요국이자 주요 수입국이다. 요소와 인산이암모늄(DAP) 등의 비료는 물론, 요소 비료 생산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산 요소 비료 및 LNG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편, 인도의 대량 구매로 인해 **글로벌 요소 공급난이 더욱 심화**하고, 중동 전쟁으로 이미 급등한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ET)가 인용한 그린 마켓츠 자료에 따르면, 중동산 요소 비료는 전쟁 발발 전 톤당 490달러 수준에 거래됐다.

뭄바이에 기반을 둔 비료 업계 관계자는 "생산자들이 이미 인도에 대한 판매를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구매국들이 비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입 비용 상승은 또한 인도의 비료 보조금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인도 정부는 비료 회사가 농민에게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뉴시스(2026.4.23.) 기사내용 인용

❑ 농식품부 "비료·농업용 필름, 재고 부족 확인시 즉각 해소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비료와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재고 부족 확인 시 즉각적인 해소 조치에 들어가고 제조업체 공급 여건에 대한 조사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요 농자재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봄철 영농에 필요한 물량은 전반적으로 확보된 상태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공급 지연이 발생하며 현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주요 농업인 단체 및 품목단체와 소통 체계를 구축해 작기별 수요와 농작업 일정에 맞춰 애로사항을 즉시 접수·해소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던 '중동 상황 공급망 상담·소통방'을 '농자재 수급 관련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네이버폼을 활용해 농업인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애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실제 농식품부는 비료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즉각적인 추가 공급 조치를 취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 단체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농산물품질관리원·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어려움이 신속하게 농식품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확인 즉시 농업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2026.4.27.) 기사내용 인용

❑ 中 황산 수출중단에 글로벌 금속·비료시장 충격

중국이 ‘화학공업의 쌀’로 불리는 **황산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그러잖아도 중동 전쟁 여파로 공급난을 겪고 있는 글로벌 금속·**비료 시장에 또다른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 행보가 희토류와 황산에 이어 마그네슘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세계 최대 황산 수출국인 중국은 자국 황산 생산업체들에 이달부터 수출을 중단하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다만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고 구체적인 시행 시점도 따로 공지되지 않은 상태다.

구리·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황산은 **인산비료 생산**과 구리 생산·정유·배터리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기초소재다. 황산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을 받아 올 들어 급등세를 보였다. **중동 지역 황산 생산량**은 **세계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전쟁 이후 핵심 운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이 막혔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000위안(약 22만원)을 밑돌던 t당 황산 현물 가격은 지난달 28일 기준 약 1800위안(40만원)까지 올랐다. 연초 가격 역시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세계 최대 황산 공급국인 중국이 실제로 수출 금지에 나서면 황산 가격은 한층 치솟을 전망으로, **공급 부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해 아시아 지역에서 수출된 황산 물량 약 1000만t 가운데 45%를 책임졌고 전 세계 수출량으로는 23%를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의 황산 수출 총액은 2억9000만달러(약 4300억원)로 집계됐는데 대부분 칠레와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인도 등지로 수출됐다.

중국의 올해 1분기 황산 수출량은 52만8000t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미 50% 줄어든 상황이다. 업계는 금수 조치가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5~12월 황산 333만t을 수출했는데, 수출 중단 조치가 완전히 시행될 경우 최소 300만t에 달하는 수출량이 증발하는 셈이다.

수출 중단 조치는 농번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가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4년 6월부터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해 식량 자급률 제고와 안보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 정보 제공업체 아거스 미디어의 사라 말로우 글로벌 에디터는 SCMP에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식량 안보로, 이에 따라 자국 내 비료 산업에 집중해왔다"며 "황산은 인산질 비료 생산에 필수 원료"라고 말했다. 황산 가격 급등은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식량 가격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난을 유발할 수 있다.

관련 업계는 대체 공급처를 물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로 재미를 본 중국이 황산에 이어 또다른 자원 무기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 세계일보(2026.5.1.) 기사내용 인용

❑ 중동전쟁에 비료·사료값 들썩…농가 부담·물가 '동시 비상'

– 중동산 요소 가격 80% 이상 급등…하반기 비료값 반영 여부 촉각

– 국제유가·환율 상승에 사료값 인상 압력 확대

– 농식품부, 비료 사용 절감·국산 원료 확대 등 대응 추진

중동 전쟁 여파로 비료와 사료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농가 생산비 부담 확대와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적정 비료 사용과 사료 원료 수입 의존도 축소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동산 요소 가격 85% 급등…비료값 인상 압력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비료는 농협이 전체의 97%를 판매하고 있으며, 농가 부담을 고려해 현재 1톤당 87만1천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협은 비료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비료 기준가격을 정하고, 여기에 수수료 등을 더해 농가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이 ±5% 이상 변동할 경우 분기별로 **기준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료 가격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소는 질소 비료의 핵심 원료로, 국제가격 변동이 비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농업용 요소의 국제가격(지난달 27일 기준)은 수입량의 43.7%를 차지하는 중동산은 1톤당 900달러, 35.5%를 차지하는 동남아산은 890달러로, 전쟁 직전보다 각각 **85.6%**, **83.1% 상승**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농가 사용 비중이 높은 요소 단일비료와 복합비료 등 주요 요소 사용 비료의 경우 8월까지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적정 시비 유도…비료 사용량 관리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비료 과다 사용 관행을 줄이고 적정량 사용을 유도하는 등 수요 관리에 나섰다. 농업인이 재배 전 토양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토양 내 양분 함량을 바탕으로 작물별 적정 비료 사용량과 시비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을 활용하면 작물명과 지번, 재배 면적 입력만으로 질소·인산·칼리 등 영양소별 적정 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료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줄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비 처방 이용 건수는 2023년 7만 2600건에서 2025년 7만 790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비료 과다 사용 농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반기 농자재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수급 불안 심리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노컷뉴스(2026.5.3.) 기사내용 인용

❑ 무기질비료, '감축 대상'인가 '필수 자재'인가

무기질비료를 둘러싼 정부 정책의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토양 환경 개선과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이유로 무기질비료 사용 감축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국제 원료가격 급등**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료업계와 잇따라 회의를 열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무기질비료 사용을 줄이는 정책의 큰 줄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과거 식량 증산기, 무기질비료가 생산량 확대의 핵심 자재로 활용됐으나 장기간 과다 사용되면서 염류 집적 문제로 토양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져왔다. 유기질비료와 축산퇴비 활용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

핵심은 무기질비료를 바라보는 **정책의 균형**이다. 정부는 무기질비료 사용량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다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원료가격 상승으로 비료 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공급 안정에 나섰다.

이 장면은 무기질비료의 **현실적 위치**를 보여준다. 정부가 수급 안정에 공을 들인다는 것은 결국 **무기질비료**가 여전히 **농업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재**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정책 메시지도 달라져야 한다. 무기질비료를 단순히 축소할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유기질비료와 상호 보완하며 **생산성을 지탱하는 핵심 자재**로 인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기질비료를 무조건 줄이는 방식은 생산량 감소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급불안이 겹칠 경우 농가 경영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비료산업을 바라보는 인식도 재정비해야 한다. 무기질비료 업체를 단순히 감축 정책의 대상이나 가격 인하 압박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들 업체와 종사자 역시 농업 생산체계를 떠받치는 한 축이다. 원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국내 생산·공급 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제가격 급등이나 물류 차질이 발생했을 때 농업현장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무기질비료는 줄여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지켜야 할 필수 자재라는 이중적 현실 속에 놓여 있다. 다만 정부가 수급 안정에 나설 정도로 중요한 자재라면, 그 중요성부터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농업을 위한다는 정책은 특정 자재를 축소하는데 연연할 게 아니라 농가 생산성과 토양 건강, 산업 기반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에서 설계돼야 한다.

※ 농수축산신문 (2026.5.4.) 기사내용 인용

❑ 무기질비료 업계, "삼중고" 아우성

- 원자재 가격·환율 치솟는데 공급가격 동결 경영 압박
- "생산하는 족족 적자" 호소
- 농가 부담 전가 없는 선에서 가격 인상·지원 대책 주문

"올해 1월 톤당 400달러였던 요소 수입 가격이 지금은 800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이 가격에 수입한 원자재로 비료를 생산하는데도 공급 가격은 그대로인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무기질비료 생산 업체들이 아우성이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비료 원자재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공급 가격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재 수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역시 1400원 후반대에 머물면서 경영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비료 업계가 **원자재 가격과 환율, 공급 가격** 등 '**3중고**'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국내 비료 생산업체들에 따르면 비료 생산 핵심 원재료 가격이 중동전쟁 이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소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월 톤당 389달러였던 요소 수입 가격은 올해 1월 **443달러**로 올랐다. 이후 중동전쟁 발발로 요소 수입 가격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톤당 **800달러**에 근접하거나 일부 국가는 800달러를 넘어섰다. 요소가 원재료 중 비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협을 통한 계통공급 비료 가격은 인상되지 않아 업체들의 손실이 생산을 할수록 가중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비료협회가 올해 농협 계통공급 가격 당시의 요소 수입 가격과 현재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도 심각한 수준이다. 4월 말 기준 회원사들의 4만8500톤 수입 물량을 적용할 경우, 현재 공급 가격을 유지하면 최소 **620억원**에서 최대 **124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A 비료업체 관계자는 "이미 가격이 인상된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가격은 그대로여서 생산하는 족족 적자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B 비료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원재료 확보는 안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비료 공급을 우선해야 하니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중동전쟁 이후 3월부터 가수요가 붙으면서 지금은 원자재 수급도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비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농가에 인상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와 농협이 가격 조정과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24년 4월 환율 하락 당시 즉각적으로 가격이 인상된 전례를 들어, 현재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격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료협회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과 환율 상승분 등을 반영한 비료 가격 조정을 건의했다.

C 비료업체 관계자는 “농협 계통공급이 아닌 양액이나 관주 비료는 이미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무기질비료는 농협 계통공급 비중이 높다 보니 가격 인상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 업체의 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B 비료업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비료 수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수요가 붙어 생산이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현장에서는 수급에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비료 업계가 건강해야 농업 생산도 안정적일 수 있는데, 업계 현실은 외면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2026.5.5.) 기사내용 인용

❑ 중동전쟁에 비료·비닐·사료까지 줄인상…농가 덮친 '3중고'

– 국제유가 급등에 농자재 '줄인상' 우려

– 시설원예·축산농가 생산비용 '경고등'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황기연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이 5일 남해화학 여수공장을 방문,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업 현장에도 '인플레 폭탄' 우려가 번지고 있다. 비료와 시설하우스용 비닐, 축산 사료 가격까지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농가 부담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4월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단숨에 0.84%p 끌어올렸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6%를 기록하며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유가 상승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비료와 농업용 비닐, 사료, 시설원예 냉·난방비 등 주요 생산비 대부분이 석유·가스 가격과 직결돼 있다. 일부 농자재 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 물량과 재고를 점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중동 지역은 질소·요소 비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와 암모니아의 핵심 공급지다. 특히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동 국가는 글로벌 요소·암모니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전쟁 이전까지 전 세계 해상 운송 비료 원료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요소사용 비료공급 3개사(남해화학, 풍농, 누보)의 완제품은 7월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비료 재고는 2개월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전쟁 추경'을 편성하고 석유 가격 안정에 나섰다. 그러나 농업계 안팎에서는 소비자 물가 대응과 별개로 농업 생산비 안정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석유 최고가격제만으로는 농업 현장의 비용 부담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비료·사료·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 수급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 시설원예·축산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농업 보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계에서는 중동 리스크 장기화 여부에 따라 하반기 농산물 가격과 농가 경영 안정성이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뉴스빔(2026.5.7.) 기사내용 인용

❑ 무기질 비료업계 삼중고 탈출 해법 시급

무기질비료업계가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공급가격 동결** 등 **3중고**에 시달리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톤당 400달러 수준이던 원자재인 요소가격이 중동전쟁 발발 이후 최근에는 800달러까지 급등한 데 이어 원자재 수입 가격에 영향을 주는 환율도 1500원대에 육박한 실정이다. 여기에 이러한 가격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공급가격이 동결되면서 무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만큼 적자가 쌓이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농협을 통한 계통공급 비료가격이 인상되지 않아 4월말 기준 한국비료협회 회원사들의 적자액은 최대 12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다.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은 지금의 적자만 쌓이는 가격구조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의 극심한 적자상태가 지속될 경우 생산업체들의 줄폐업으로 생산기반 자체가 와해돼 결국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비료를 농촌에 공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된다. 정부는 무기질비료 업계의 위급한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과 환율상승분을 감안한 비료가격 조정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농협은 무기질비료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서둘러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격인상 부담이 농가의 생산비 증가로 전가되지 않도록 **가격인상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국농어민신문 (2026.5.12.) 기사내용 인용

❑ 美 비료기업 모자이크, 중동 전쟁에 비료 생산 감축

미국 최대 비료기업 모자이크가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미국 내 **인산염 비료 생산을 200만t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봉쇄돼 있기 때문이다.

CNBC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브루스 보딘 모자이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플로리다주와 루이지애나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일시적으로 기존의 50%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인산염 비료 가공에 필요한 황산의 원재료 황의 공급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모자이크의 주가는 이 소식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1.82% 하락한 21.79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4%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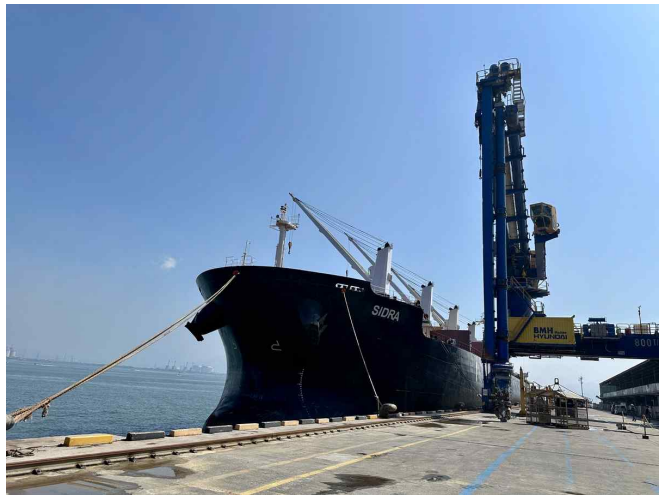
모자이크의 올해 1부기 실적도 시장 예상을 밑돌았다. 모자이크의 1분기 영업손실은 3억7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주당순이익(EPS)은 5센트로 시장 예상치 23센트의 20%에도 못 미쳤다. 올 연간 인산염 비료 생산 가이던스도 내놓지 않았다.

시장에선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이 식량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이달부터 식량 안보를 내세우며 비료의 주 재료인 황산 수출을 금지한 것도 황의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 한국경제(2026.5.12.) 기사내용 인용

❑ '수급 차질' 요소 1만8천t 실은 몰타 선적 여수 낙포부두 입항

– 접안 능력 초과 선적 한시적으로 입항 허용해 수급 지원



중동 전쟁 여파에 수급 차질을 빚는 비료 원료 확보를 위해 부두의 수용 능력을 초과한 대형 선박에 한시적으로 접안을 허용하는 등 민관 공조로 수송이 성사됐다.

13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몰타 선적 시드라호는 이날 전남 여수 낙포부두에 접안해 1만8천t가량 요소를 하역하고 있다.

국내 비료 시장점유율 1위인 남해화학은 카타르 등 주요 수출국 공급이 여의치 않자 오만, 동남아 등으로 눈길을 돌렸다.

비료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를 앞두고 오만산 요소를 긴급히 공수하려 했으나 부두 접안능력(DWT) 한계에 부닥쳤다.

낙포부두는 5만t급 선적까지 접안할 수 있지만, 시드라호는 5만6천t급이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수심, 부두 시설물 여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드라호의 접안을 허용했다.

남해화학은 이달 중 모두 **3만3천t의 요소를 확보**해 당분간 비료 생산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관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중동 사태로 여수산단 화주사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안전성을 전제로 탄력적인 부두 운영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2026.5.13.) 기사내용 인용

❑ 인도, 복합비료 135만t 수입 결정…"단일입찰 최대 구매량"

– 연간 수입량의 25%…지난달엔 요소비료 250만t 수입 결정

중동전쟁의 여파로 비료 수급난을 겪는 인도가 복합비료인 **인산이암모늄(DAP) 약 135만톤(t)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준공기업 비료업체인 인디언 포타시 리미티드(IPL)는 입찰을 통해 한 공급업체로부터 t당 930달러(약 139만1천원)에 76만5천t, 또다른 업체로부터는 t당 935달러(약 139만8천원)에 58만1천500t의 DAP를 각각 수입키로 최근에 합의했다.

총 수입량 약 135만t은 인도의 연간 DAP 수입량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일 입찰을 통한 DAP 구매량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DAP는 질소와 인산이 결합된 형태로 그 자체로 복합비료이면서 다른 비료 성분과 혼합할 수도 있기에 복합비료 원료로도 쓰인다.

정부 소식통들은 IPL이 120만t의 DAP를 구매하려고 지난달 입찰을 공고해 t당 930~1천100달러인 총 230만t의 DAP 물량을 제안받았고, IPL은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한 일부 공급업체들로부터 약 135만t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입찰 내용에 따르면 공급업체들은 오는 8월 15일까지 선적항에서 물량을 실은 선박을 인도로 출항시켜야 한다.

76만여t은 인도 서부 해안, 58만여t은 동부 해안을 통해 각각 인도될 예정이다.

공급업체들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집트, 모로코 등지에서 DAP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동전쟁으로 주요 글로벌 해상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비료난이 촉발됐고 비룟값도 크게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는 비료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DAP 구매 확정으로 전세계 DAP 공급량이 그만큼 줄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세계 최대 비료 수입국 가운데 하나인 인도는 앞서 지난달에는 요소비료 250만t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단일 입찰을 통한 요소비료 수입으로는 이 역시 역대 최대다.

14억여명으로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에서 농업은 고용 및 식량 안보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이며 농업 종사 인구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46%를 점한다.

※ 연합뉴스(2026.5.13.) 기사내용 인용

❑ 대구보건환경硏, 미세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비료 개발…SCIE급 국제학술지 게재

– 비료 유실률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 환경오염과 미세플라스틱 문제 동시 해결 기대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재덕 환경연구사가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박만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비료 오염 저감 및 효율 향상**' 연구 논문이 SCIE(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 'ACS ES&T(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Engineering(Impact factor:6.7)' 4월 2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학술지는 미국 화학회(ACS)에서 발행하는 환경공학, 환경화학 분야의 SCIE급이다.

이번 연구는 기존 완효성 비료의 코팅제로 사용돼 토양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 원인으로 지목돼 온 **플라스틱 성분 대신 실리카(Silica) 매트릭스를 활용**해 **영양분을 서서히 방출하는 친환경 비료 기술**을 개발한 데 의미가 있다.

공동 연구팀은 나노 복합 구조를 통해 비료 성분의 유실을 줄이고 토양 내 금속 이온에 의해 비료 성분이 굳어버리는 불용화 현상을 차단하는 원리를 규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비료는 토양 내 영양분 소실률이 82.1%에 달해 작물 성장을 위해 비료를 필요 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소실률이 24.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료 낭비를 기존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자원 활용 효율을 극대화**한 결과다.

검정콩 재배 실험에서는 해당 기술을 적용한 비료 사용 시 기준 비료 대비 작물의 지상부 중량이 약 127.9%(약 2.3배) 증가하는 생육 촉진 효과도 확인됐다.

아울러 기존 고효율 비료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던 800℃ 이상의 고온 공정을 450~500℃ 수준의 저온 공정으로 최적화해 제조 에너지와 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제성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상희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환경 분야에서 끈기 있게 이어온 우리 연구진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저감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인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농민신문(2026.5.15.) 기사내용 인용

❑ EU, 비료 비축 추진…이란 전쟁에 식량·농업 안보 비상

– 비료 공급망 불안에 식품 가격 급등 우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비료 비축과 역내 생산 확대**에 나섰다. 전쟁 여파로 글로벌 비료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식량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별 최소 비료 재고 의무화와 공동 구매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주요 비료에 대한 대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프 한센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식량 안보는 곧 비료 안보”라며 “유럽은 농업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비료를 더 많이 자체 생산하고 외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U가 비료 비축 카드를 꺼낸 것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쟁 발발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비료의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질소계 비료 가격은 지난달 기준 2024년보다 약 70% 급등했다. 질소 비료 생산의 최대 80%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EU는 당장 식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농가가 전쟁 이전 사들인 비료 재고를 소진하는 올해 말부터는 비용 부담이 농산물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곡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질 경우 식품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위기를 거치며 공급망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유럽의 기조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핀란드는 이미 곡물·연료와 함께 비료 비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스웨덴은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이후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비료와 곡물 등의 비축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공동농업정책(CAP) 개정을 통해 농업 보조금 선지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물질은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질소 함량이 높아 사용을 제한해왔다.

다만 환경 규제 완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농업 단체들은 EU 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EU는 기존 탄소 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경제(2026.5.20.) 기사내용 인용

❑ 호르무즈 막히자 비료값 폭등…글로벌 식량위기 "눈앞"

- FAO "6~12개월 내 농식품 충격 현실화"
- 비료값 두배 뛰고 식량가격 3개월 상승
- "농사 포기 늘면 여파 2027년까지 지속"

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세계 식량위기 데드라인이 6~1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 경고했다. 지금 당장 각국 정부와 농업인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심각한 식량가격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각) FAO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일시적 물류 차질이 아닌 구조적 농식품 충격이라며 위와 같이 밝혔다.

◆비료값 두배, 식량가격 3개월 연속 상승=3월30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2월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봉쇄됐고 해협 통과 선박은 95% 이상 급감한 상태다. 이 해협은 세계 비료 교역량의 최대 30%,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 원유의 약 27%가 통과하는 핵심 물류 경로다.

4월2일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봉쇄 이후 비료 가격은 두배 이상 뛰었다. 19일 유럽 방송사 유로뉴스에 따르면 질소 비료 판매 가격은 2024년 평균 대비 70%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세계은행은 올해 비료 가격지수가 3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식품 원자재 가격의 월별 변동을 추적하는 FAO 식량가격지수도 중동 분쟁과 에너지 비용 상승 여파로 4월까지 3개월 연속 올랐다.

FAO는 이번 충격이 에너지에서 시작해 비료·종자로 이어진 뒤 수확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식품 인플레이션까지 전달될 것으로 분석했다. 막시모 토레로 FAO 수석 경제학자는 20일 FAO 팟캐스트에서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각국의 충격 흡수 능력을 높이고 이러한 사태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확량 감소, 2027년까지 이어진다=7일 FAO에 따르면 취동위 FAO 사무총장은 비료 공급 차질이 올해 하반기와 다음해까지 수확량 감소와 식량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료 공급이 몇 주만 늦어져도 농민들은 비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다음 수확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FAO는 단기 대응책으로 아라비아반도 동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홍해를 경유하는 대체 육상·해상 경로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에너지·비료·농업 투입재에 대한 수출 제한 금지 ▲인도적 식량 흐름 보호 ▲질소 비료 사용을 줄이는 곡물·두류 혼작 긴급 도입을 권고했다. 올해 여름 엘니뇨 발생 가능성도 높아 가뭄과 강수 이상 등 기후 충격이 식량위기에 추가로 겹칠 수 있다고 FAO는 경고했다.

◆EU 비료 행동계획 발표…실효성엔 의문=19일 유럽 집행위원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는 비료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비료 생산 확대와 수입 의존도 축소, 저탄소 대안 비료 육성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일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 농민·농업협동조합 연합(Copa Cogeca)은 단기 타격을 해소할 경제적 구제 조치가 없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 농민신문(2026.5.21.) 기사내용 인용

4 농정 이슈

1 농식품부,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수립 착수

○ 농촌 에너지 자립·농업 에너지 전환

○ 농촌자원 활용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산업계와 연구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 역시 인공지능 전환과 그린 전환, 스마트팜 확산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량안보와 조화를 이루면서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 간척지 등 농업기반시설과 바이오매스 등 농업·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에너지 전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의 에너지 자립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수익을 농가와 농촌 지역의 소득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에 구성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단장을,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TF는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농촌 에너지 자립반, 농업 에너지 전환반, 대규모 농업기반 활용반 등 3개 반으로 운영된다. 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을 통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첫 회의에서는 **농촌 생활 전반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가속화**하고 이를 **소득 증대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농촌 에너지 자립반은 영농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비롯해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농가 자가 태양광 보급 등을 재생에너지지구 제도와 연계해 설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도헌 성우농장 대표는 "농촌 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관계법령 등 제도에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방안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가치사슬 내 에너지 구조를 저비용·고효율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됐다. 농업 에너지 전환반은 노후화되고 내연기관 중심인 농기계의 수소·전동화 전환, 시설원예와 축사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설비 지원 확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도축장 등 가공시설의 자가 태양광 보급을 통한 지산지소형 에너지 전환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농기계 분야 전문가인 김용주 충남대 교수는 “전기·수소 활용 친환경 농기계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농작업별 특화 기종 등 새로운 하드웨어 개발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출력, 작업시간, 충전여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농업기반시설과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국가 에너지 전환 기여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대규모 농업기반 활용반은 간척지와 저수지 등 대규모 농업기반, 농지, 가축분뇨와 영농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상생 모델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윤성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에너지처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와 함께 농업생산기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조화로운 사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에너지 안보가 곧 식량 안보”라며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기본원칙과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TF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에너지 전환이 농업·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농업신문(2026.5.11.) 기사내용 인용

2 농산물 가격 대부분 지난해보다 낮아…수급안정 대책 지속 추진

○ 농식품부, '제17차 수급상황 점검회의'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7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품목별 수급·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다수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보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양파, 배추, 양배추, 오이 등에 대해서는 출하 물량 조절, 소비 촉진 등 수급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는 정부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수입하는 육용종란은 기존 스페인에 더해 벨기에산까지 추가 도입해 신속한 물량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태국산 신선란 224만 개는 공급이 완료됐고 미국산 신선란은 시범 수입 결과 이상이 없어 이번 주부터 정식 수입이 시작된다. 이후 미국산이나 태국산 신선란 추가 도입도 검토해 계란 가격안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우와 돼지고기도 자조금을 활용해 5월 가정의 달 할인 판매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해 돼지고기 도매시장 상장물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가공식품은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 인상 움직임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원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 실장은 "최근 대외 여건 변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축산신문(2026.5.11.) 기사내용 인용

3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기초·광역 조직 틀 마련"

- 시·군 단위 기초조직 중심 설계 : 1,000명 또는 10% 동의해야 설립
- 개인·단체별로 참여하는 회원 구조 : '대의원 100명 이내' 총회 중심 의사결정.
- 재정은 지방 중심…국가는 지원 역할 : 정치활동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이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회의소를 설립·운영**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의 운영 원칙으로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제시하면서, 분야·세대·성별·품목별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농어업회의소의 주요 기능은 정책 참여와 자문·건의, 정보·자료 수집 및 제공 등이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조직은 기초와 광역 단위로 구성된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며, 광역회의소는 시·도 단위에서 기초회의소를 기반으로 설립된다.

기초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해서는 농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함께 1,000명 이상 또는 전체 농어업인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광역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원은 개인과 단체로 구성된다. 농어업인은 개인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과 농어업 법인도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의사결정은 총회와 대의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총회는 정관 변경과 회장 선출, 해산, 위탁사업 수탁 여부 등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대의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되며, 단체대의원 비율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기초회의소의 참여를 기반으로 설립된다. 회원은 기초회의소와 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은 기초회의소 대표와 청년·여성 대표 등이 포함된다.

재정 지원 방식도 규정됐다. 국가는 교육·컨설팅·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회의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과되며, 정치활동이나 선거 개입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 정책이 정부 주도하에 하향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 법이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모으는 제도적 기반이 처음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농업인신문(2026.5.15.) 기사내용 인용

4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완화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

○ 농촌진흥청, 5월 12일 관련 고시 개정 완료

가축분뇨발효액 질소(N), 인산(P), 칼리(K) 합계 기준 0.3%→0.2%로 완화

국제 비료 원자재 수급 불안 대응 및 농가 현장 애로 해소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농자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의 비료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5월 12일자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가축분뇨발효액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분뇨발효액 확대 사용을 위해 시비처방서 발급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축분뇨발효액의 주성분인 **질소(N), 인산(P), 칼리(K) 합계 기준**을 기존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급이 불투명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부존자원인 축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축분뇨발효액 생산업체에 따르면, 기존 0.3% 기준을 맞추려면 품질 유지가 어렵고, 특히 여과된 가축분뇨발효액 생산 시 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학계·산업계·생산자 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성분 함량을 0.1%포인트 낮추더라도 토양 환경이나 비료 효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전문가 검토를 마쳤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액비 공급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값비싼 수입 무기질 비료를 대체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자원 순환형 농업 구조가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방혜선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농자재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농업인과 산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기자재신문(2026.5.12.) 기사내용 인용

5 첫 농지 전수조사…7월까지 구두 임대차→서면계약으로 바꿔야

- **농식품부 특별정비기간 운영**
- **음성적 임대차 계약 고착화 문제**
-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고 : 농지은행에 임대위탁도 가능**
- **임대차 기간 최소 3년 이상 보장**

18일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착수와 동시에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이 운영된다. 본격적인 현장 조사 개시에 앞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개인 간 구두 임대차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수조사 시행과 함께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무단 전용·휴경·임대차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추진된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 대상으로, 5월부터 행정정보·항공사진·AI를 활용한 기본조사에 이어 8월부터는 현장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1ha 이하 상속·이농 농지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한해 개인 간 임대차 또는 농지은행 임대위탁이 허용된다.

문제는 현장에서 임대차 비중이 50% 이상일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실태 파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면 계약이 원칙임에도, 구두 계약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민의 경우 친인척이나 지역 주민과 임대차를 하면서도 절차 부담 등을 이유로 구두 계약을 선호하거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8년 자경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공익직불제 수령 등을 위해 서면 계약을 기피하는 이른바 '위장 자경'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제도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실경작자인 임차농 피해 우려와 맞물리면서 음성적인 임대차 계약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정비기간은 이 같은 **위법·불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구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등에 신고하거나 농지은행 임대위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면 계약 체결 후 농지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도 최소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 농지는 5년 이상 보장받는다.

농지은행 임대위탁 대상은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상속농지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이며, 상속 농지의 경우 1ha 이상이면 농지은행 위탁이 의무 사항이다. 특별정비기간 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농지은행 전자계약을 이용하거나 농어촌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농지 소유주가 농업인일 경우 위탁수수료(연간 임차료의 5%)도 면제된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특별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계약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전수조사 이전에 합법적인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정부는 지주가 전수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 피해 가능성 우려에 따라 농지공간포탈 내 온라인 신고센터와 오프라인 신고센터(1811-8852)를 설치한다.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피해를 입은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의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은행 임대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농어촌공사는 임대위탁 활성화를 위해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은행 포털에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 농어민신문(2026.5.15.) 기사내용 인용

⑥ 쌀값 5~8% 떨어지면 정부 개입, 3~5% 초과 생산 시에도 수급대책 검토

○ 양곡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쌀전업농, 수급위 권한 강화 요구

정부가 쌀 수급 불안 발생 시 시장격리와 매입 등 **수급안정대책**에 나서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대비 3~5% 수준이거나, 단경기(7~9월) 쌀값이 평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5월 7일~6월 16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선제적 수급관리**'와 '**정부 책임 강화**'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양곡수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시장격리·매입 등 대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시행일은 오는 8월 27일이다.

특히 농업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정부 개입 기준의 구체화다. 정부는 하위법령에서 ▲쌀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5% 수준일 경우 ▲단경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를 수급안정대책 검토 범위로 제시했다.

다만 실제 시장격리나 매입 여부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법률상 자동 시장격리 방식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급 과잉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대응 의무를 지게 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일부 조항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쌀전업농은 우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현행 '생산자단체 대표' 표현을 '해당 품목 농업인 및 관련단체 대표'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될 경우 실제 현장 농업인단체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또 품목대표 위원의 임기를 해당 직위 재직 기간과 연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생산·유통 현장에서 수급 불안 조짐이 포착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수급불안 기준에 대한 보완 요구도 담겼다. 쌀전업농은 단경기 평균가격이 최근 5년 중 최고·최저값을 제외한 평균 대비 5~8% 하락할 경우로 규정한 정부안에 대해, 시행 첫해에는 전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간 가격 변동 폭이 컸던 만큼 단순 절단평균 방식만 적용할 경우 실제 가격 하락 상황이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기준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 '최저가격 기준'에 도달하거나 근접할 경우 수급대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쌀값 하락이 수년간 이어질 경우 기존 기준만으로는 대응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했다. 쌀전업농은 정부가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한시적 기구로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과 농업인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한국농업신문(2026.5.18.) 기사내용 인용

7 농협법 개정안 후반기 국회로…이 대통령 "개혁 속도" 주문

○ 지방선거 앞두고 상반기 처리 무산…정치권, 농협 조직 부담 의식

○ 대통령 농협 정상화 의지 재확인…하반기 입법 논의 재점화 전망

–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농협법 개정안 논의가 하반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여권은 지방선거 이전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입법에 속도를 냈지만, 농협 조직과 **지역 조합장들의 반발 기류**, **정치권 내부 부담감** 등이 겹치며 상반기 처리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협 개혁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농협 정상화와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힘을 실으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농업계 안팎에서는 농협법 개정 지연의 가장 큰 배경으로 **지방선거**를 꼽고 있다. 농협은 전국 조직망과 지역 기반 영향력이 큰 조직인 만큼,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과 지역 농협의 반응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실제 최근 지난 12일 개최된 국회 공청회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기존 개혁론보다 농협 측 논리에 가까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체계 독립 등 민감한 지배구조 개편을 우선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당초 추진 기조와 온도 차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농협 내부에서는 “문제는 제도보다 운영의 문제”라는 논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중앙회 권한 집중 구조와 견제 장치 미비가 반복적인 논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내부에서는 후자보다 전자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14일 제3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협의 공공성과 조합원 중심 운영체계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협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농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개정 논의 재추진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에는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중앙회 권한 구조 개편**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농협 내부 반발과 정치권 이견이 여전히 큰 만큼,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업계 관계자는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농협 조직의 반응을 의식한 측면이 컸다”며 “다만 대통령실까지 개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하반기에는 다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한국농업신문(2026.5.18.) 기사내용 인용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생산·출하 현황

(단위 : 천 톤)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생 산 량	2,039	1,750	1,723	1,741
출 하 량	1,860	1,769	1,647	1,703

* 협회 회원사 기준, 출하량은 농업용과 수출용 합산임

❑ 최근 3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원자재 톤당 수입가격 및 환율

(단위 : $,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4월말
요 소	469	429	402	395	416	456	572
D A P	638	528	592	568	673	737	749
염화칼륨	533	346	330	310	316	364	386
환 율 (매매기준율)	1,295	1,317	1,350	1,377	1,427	1,417	1,487

※ 관세청 무역통계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6 이달의 화분

❑ 봄의 끝자락, 초록이 짙어지는 시간-스킨답서스

5월과 6월은 관엽식물을 키우기 좋은 시기입니다. 기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낮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물의 생육도 활발해집니다. 겨울 동안 성장이 더뎠던 실내 식물도 이 시기부터 새잎을 내고 줄기를 뻗으며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계절에 부담 없이 시작하기 좋은 식물이 스킨답서스입니다. 스킨답서스는 실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생명력이 강한 편이라 처음 식물을 키우는 사람도 비교적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잎이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모습이 보기 좋아 책상 위, 선반, 창가, 사무실 한쪽에 두기에도 잘 어울립니다.

스킨답서스는 하트 모양에 가까운 잎과 길게 뻗는 줄기가 특징인 덩굴성 관엽식물입니다. 잎은 초록색 바탕에 연한 노란빛이나 흰빛 무늬가 섞이는 경우가 많아, 단조로운 실내 공간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줍니다.

줄기가 자라면서 아래로 늘어지거나 옆으로 뻗기 때문에 화분에 심어 두어도 좋고, 길게 자란 줄기를 유리병에 꽂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줄기 마디에서 뿌리가 잘 나오는 편이라 물꽂이로 번식시키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꽃을 감상하는 식물은 아니지만, 잎의 색감과 줄기의 흐름이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식물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만으로도 공간에 초록의 여백을 만들어 주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가까이 두기 좋은 식물로 꼽힙니다.

○ 스킨답서스 관리 포인트

☑ 1. 빛

강한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간접광이 좋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잎이 탈 수 있고, 빛이 너무 부족하면 줄기가 길게 웃자랄 수 있습니다. 창가 가까이에 두되, 한낮의 강한 햇빛은 커튼을 한 번 거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물

겉흙이 마른 뒤 충분히 줍니다. 화분 받침에 물이 고이면 뿌리가 상할 수 있으므로 고인 물은 버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 주는 날짜를 정하기보다 흙 상태를 보고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3. 위치

냉난방기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가 급격히 변하지 않는 곳에 두면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사무실에서는 에어컨 송풍구 아래나 출입문 바로 옆보다는 밝고 바람이 부드럽게 통하는 자리가 좋습니다

☑ 4. 잎 관리

잎에 먼지가 쌓이면 젖은 천으로 가볍게 닦아 주면 좋습니다. 잎이 깨끗하면 보기에도 좋고, 식물 상태를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잎 색이 연해지거나 끝이 마르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 5. 번식

줄기를 잘라 물에 꽂아 두면 뿌리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병이나 컵에 꽂아 두면 실내 장식 효과도 있습니다. 뿌리가 충분히 자라면 흙에 옮겨 심어 새로운 화분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 6. 흙

배수가 잘되는 흙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흙이 오래 젖어 있으면 뿌리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물 빠짐이 좋은 배합토가 적합합니다. 화분 흙이 딱딱하게 굳었다면 물이 고르게 스며들지 않을 수 있어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7. 주의할 점

물을 자주 많이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실내식물은 물 부족보다 과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고 흙이 계속 젖어 있다면 물 주는 간격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잎과 줄기를 보면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잎이 축 처지면 물 부족, 잎이 노랗게 변하면 과습이나 빛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오래 들여다보지 않아도, 한 번씩 흙과 잎을 살피는 습관만으로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스킨답서스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천천히 키워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작은 관심만 꾸준히 더해진다면, 생각보다 오래 곁에 머물며 일상에 잔잔한 여유를 더해 줄 것입니다.

8 회원사 제품 소개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골드측조플러스

○ 성분량 : 28-8-9+1+0.1

○ 특성 및 효과

- 입자 크기 대폭 확대로 균일한 측조시비 가능
- 완효성요소 함유로 효과가 지속적
- 질소 함유량이 28%로 시비량과 노동력 절감

❑ ㈜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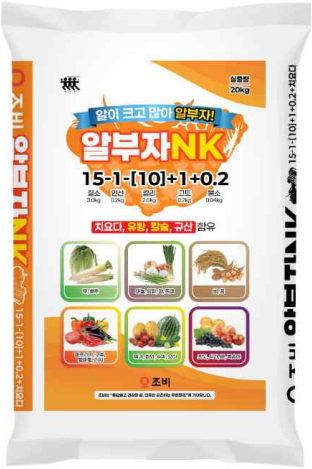
○ 제품명 : 원샷24

○ 성분량 : 24-8-8+2+0.2(측조시비 가능)

○ 특성 및 효과

-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성분이 함유된 고농도 복합비료
- 저인산비료로 이끼나 괴불 발생이 심한 토양에 효과적

❑ (주)조비



○ 제품명 : 알부자NK

○ 성분량 : 15-1-[10]+1+0.2 (치요다 함유)

○ 특성 및 효과

- 치요다와 2종복비가 결합된 웃거름비료로서 중/후반기 생육에 효과적
- 양분을 균형적으로 공급하여 비료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을 줌
- 황산칼리(유황) 함유로 작물의 맛, 향, 색 등의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줌

❑ KG케미칼(주)

○ 제품명 : 규산NK

○ 성분량 : 18-0-14+2+0.2

○ 특성 및 효과

- 규산 다량 함유로 도복방지 및 충예방효과
- 칼리함량이 높아 토양에 도열병 방지효과
- 쌀의 윤기를 높여주어 미질향상

❑ (주)팜한농

○ 제품명 : 롱스타K플러스
○ 성분량 : 22-7-10+1+0.1 (질소·칼리 코팅 완효성 비료)
○ 특성 및 효과
- 질소·칼리 코팅으로 후기 웃거름(이삭거름)까지 생략 가능 꾸준한 양분 공급으로 작물의 품질을 향상
- 질소만 코팅된 비료 대비 사용량을 절감 코팅 비율이 높아 측조시비 및 기계 살포에 적합
- 생육에 필요한 적정 NPK 함량으로 초기부터 생육이 우수 충분한 분얼 수 확보 및 수확량 향상
- 칼리까지 코팅되어 있어 등숙율 및 완전미 비율을 높여 고품질 쌀을 생산
- 고토, 붕소, 칼슘, 규산, 유황 등 다양한 필수원소 함유로 미질 향상 및 생리장해 경감
- 높은 코팅 비율로 비료 성분이 서서히 용출, 유실도 적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줄여주는 환경친화적인 비료

❑ ㈜풍농

○ 제품명 : 미생물모든원예
○ 성분량 : 13-8-10+2+0.2+황산칼륨
○ 특성 및 효과
- '미생물모든원예'는 복합비료와 미생물을 동시에 공급하여 토양 개선과 작물의 뿌리활력 촉진, 비료 흡수 효율을 개선
- 함유된 미생물(Bacillus) 2종이 토양물리성을 개선하고 작물 생육 초기 환경 적응성을 높여주며 비료 흡수를 극대화하고 작물의 병해충 내성 증대
- 황산칼륨을 함유해 농산물의 맛, 당도, 때깔 및 저장성 향상 등에도 효과적
- 연작장해 및 염류집적 등으로 작물 생육 저하가 우려되는 환경(농경지)과 밭작물·과수류 농가 사용 시 피해를 경감

❑ ㈜한국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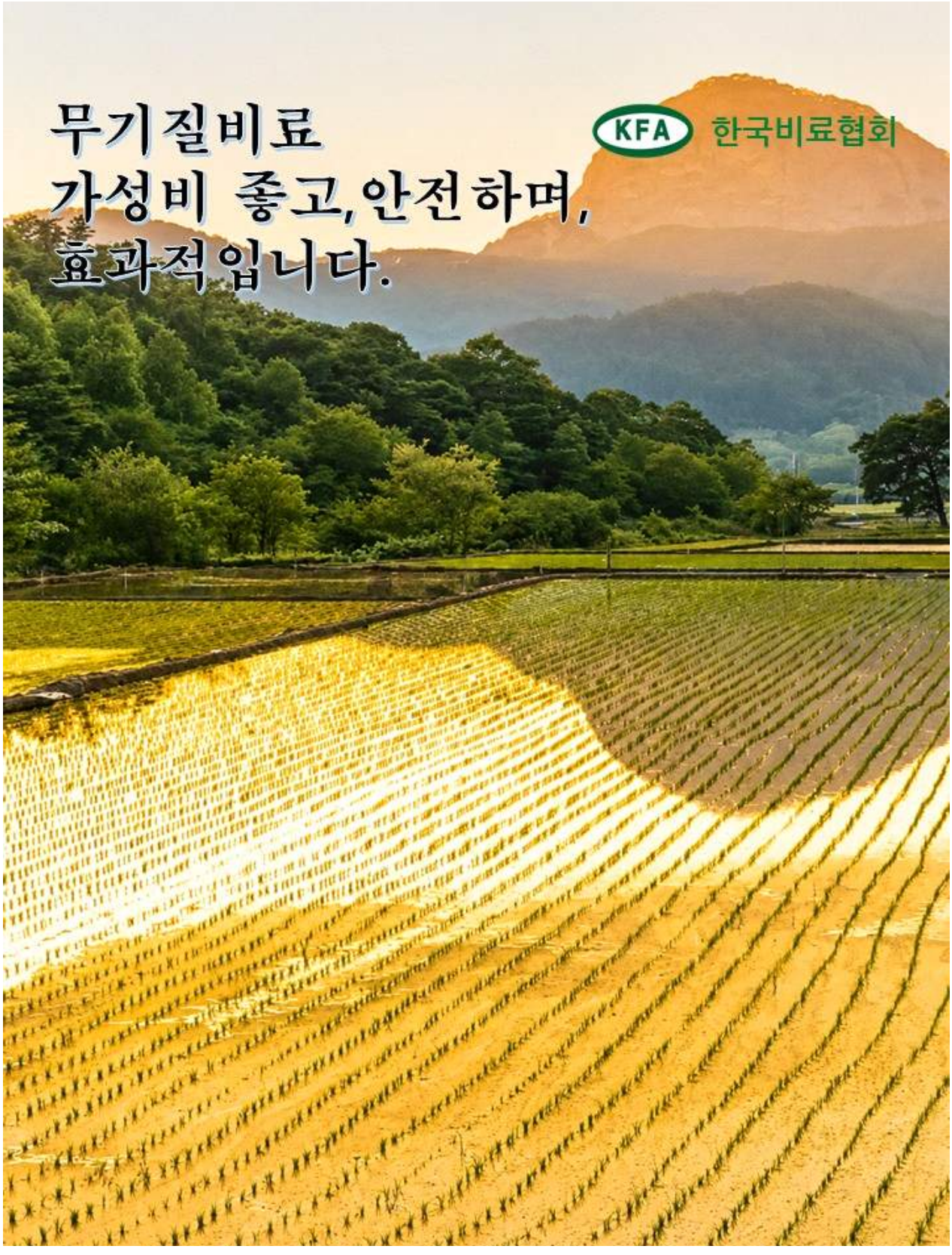
○ 제품명 : 측조30

○ 성분량 : 30-6-7+1+0.1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 코팅요소가 함유된 고농도 질소 비료로 시비 노동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고토, 붕소, 규산, 칼슘 등 다양한 미량요소를 골고루 함유하여 생리장해 예방 및 수확량 증대
- 아연(Zn) 성분을 보강하여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어린 잎의 황화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

※ 회원사 자료 인용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3 FAX : 02-552-2814
남해화학㈜ · ㈜조비 · ㈜팜한농 · ㈜풍농 · ㈜한국협화 · ㈜세기 · KG케미칼㈜